

기관돋보기 | 음성군노인복지관

품격 있는 노년을 향해

음성군노인복지관은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 노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 온 노인복지기관이다. 웰다잉 교육,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천사장학회 운영 등 노인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욕구조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복지관의 주요 사업과 운영 과정 및 현장에서의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음성군노인복지관(관장 임종훈)은 금양읍에 위치한 노인복지 전문기관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은 '선배시민의 품격 있는 노년'을 상상하라는 슬로건 아래 노년사회화교육, 건강생활 지원사업 등 노후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노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사랑의 송편 나누기'와 '천사장학회'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과 후배 세대를 돕는 나눔 문화를 이어왔으며, 2020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사업 선정을 계기로 노인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복지활동을 확대해 왔다.

현재는 ESG 실천을 위한 '선견지명', 재능기부 중심의 '행복실현', '반딧불' 봉사단 등을 운영하며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기준 복지관에는 약 80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하루 평균 2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교육·여가 프로그램에는



금양읍에 위치한 음성군노인복지관 전경.

세대통합·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노년 지원 웰다잉·장학회·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등 특화사업 추진

약 4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로식당과 미용실 등 상시 운영 사업에도 하루 평균 18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노인의 대표적인 여가·복지 거점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음성군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지원을 받아 '웰다잉 프로그램 전국 확산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 준비 교육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죽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관 이용 노인들로 구성된 '천사장학회'를 운영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노인이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를 이끄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선배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세대 간 교류를 위한 노력도 이어져 대소청소년센터와 연계한 '1·3세대 소통 활동'을 운영하며 노인인 청소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인에게는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청소년에게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복지관은 노인의 주도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선배시민'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은 복지관 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이용 인구가 많은 장소를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며 선배시민의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있다. 또한 '선배시민대학'을 운영해 참여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노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20여 년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축적해 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관은 매년 두 차례 이용자 욕구 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직원 교육과 직무연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기별 사업평가와 자문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복지관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늘어나는 이용 수요와 변화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임종훈 관장은 "고령 인구 증가로 복지관 이용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시설 환경과 예산, 공간의 제약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는 증가하는 반면 종사자 수는 그대로여서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음성군노인복지관은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노인인 복지관이 상호작용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북도, 복지시설 호봉제 정착 '처우개선 본격화'

대상 확대·근로실태조사 병행...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개선

충북도가 2일 사회복지현장의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지원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호봉제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폭력피해지원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그동안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설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으며, 매년 관련 예산도 크게 늘려왔다. 이는 시설 유형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예산은 2022년 9억 2000만원에서 2023년 25억 8000만원, 2024년 37억 8000만원, 2025년 53억 9000만원에 이어 올해 73억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도는 예산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다함께돌봄센터까지 지원 대상에 넓혀 복지시설 278개소(924

명)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인력 이탈 방지와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충북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임금 수준, 수당 및 복지제도, 근무환경, 직무만족도 등 전반적인 근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동경 보건복지국장은 "호봉제 확대 시행과 실태조사를 통해 종사자의 노고에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민이 의료비 후불제 시행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 의료비 후불제 35개 요양병원 전면 확대

중증질환자 간병비까지 지원

충북도는 목돈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에 이달 3일부터 도내 35개 요양병원으로 전면 확대한다. 의료비 후불제는 지난달 24일 기준 누적 신청자 2718명, 신청 금액 74억원을 기록하며 충북의 대표적인 의료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도민을 줄이기 위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6개 공립요양병원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의료비 후불제 지원 사업은 이번 확대를 통해 도내 모든 요양병원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질환자는 진료비뿐 아니라 그동안 큰 부담이었던 간병비 등 치료에 따른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암, 심뇌혈관질환,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이번 조치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 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동경 보건복지국장은 "요양병원 환자는 치료와 간병이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전면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군노인복지관 직원 단체사진.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쉽고 간편하게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01 발송횟수: 주 3회
- 02 발송내용
 - 도내 사회복지 행사(주 1회)
 - 유관기관 공모사업(주 2회)
- 03 발송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이어져

경남 거창군 방문... 공공 산후 시스템 관심

제천시는 12일 경남 거창군 관계자들이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방문을 위해 조리원 설계를 위한 자문을 구하고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거창군이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간 배치와 동선 설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거창군 관계자들은 단순한 운영 현황 파악을 넘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천시만의 특화된 설계 구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견학팀은 방역 지침에 따라 일부 내부 시설은 확인하지 못

했으나 외부 사찰과 상세한 도면 설명을 통해 신생아실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관찰실, 공기 정화 및 살균 시스템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면밀히 살폈다.

거창군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계 단계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향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은 건립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개원 전에는 경기도 평택시와 경북 예천군 등이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과 설계 방향을 벤치마킹했으며, 개원식 당시에도 충북 충주시, 경기도 시흥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전경.

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영월군 등 여러 지자체 관계자들이 시설을 견학했다.

이는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과 산후 피복관리 무료 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준공 전부터 많은 지자체가 방문한 데 이어 거창군까지 찾아와 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서비스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충북 첫 'AI 특성화 평생학습도시' 추진

470명 대상... AI 기초부터 시민강사 양성까지 3단계 교육

충주시는 교육부가 추진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에 선정돼 AI 특성화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201개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9곳만 선정된 사업

으로, 충주시는 국비 2056만원을 포함해 총 4112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를 통해 AI와 공공데이터 기반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AI로 빛어내는 충주의 숨결, 충주애 빠지다'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470명의 시민이 참여해 AI 기초 교육을 진행하는 '실현실 단계', 시민강사와 시민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프로젝트 스튜디오 단계', 생활권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학교 단계' 등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문해교육과 디지털 교육을 결합한 고령친화 AI 교육을 비롯해 교육부 RISE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래밍, 건국대학교 '읍면동 백년 서원' 등 생활권 학습공간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AI·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하정숙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시민 중심 평생학습 정책과 AI·디지털 기반 교육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AI 기반 평생학습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전국 첫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개관

VR·AR 기반 체험공간 조성... 장애인 재활·여가지원 확대

청주시는 지난 20일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맞춤형 활동 지원을 위해 흥덕구 신봉동 복지타운에 조성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등 시 관계자를 비롯해 청주시의원, 김종강 천주교 청주교구장, 이용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축복예식,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 디지털 콘텐츠 체험공간으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직업, 스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이다. 조성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49억원이 투입됐다.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966㎡ 규모로 구성됐다. 1층에는 청·장년층을 위한 직업체험 공간(디지털 키오스크 훈련, 세차훈련 시스

템)과 재활훈련을 위한 대근육 트레이닝존(가상현실 스키, 휠체어 레이싱), 전면 스크린 기반 증강현실 체험존(스크린 사격, 3D 모션 플레이)이 마련됐다.

2층에는 영유아를 위한 볼풀장과 트램폴린, 3면 스크린 체험공간을 디지털 콘텐츠와 접목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며, 체험단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누리집 사전예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가 디지털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재활과 여가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흥덕구 신봉동 복지타운에 조성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단양군,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20% 증가

하루 650명 이용... 외출 늘며 지역 상권 '훈풍'

단양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사업'이 시행 한 달여 만에 이용자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2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한 이후 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하루 평균 약 650명의 어르신이 교통복지카드를 통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사업이 빠르게 일상 속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카드 발급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체 대상자 1만 1009명 가운데 지난 17일 기준 5724명이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발급률 52%를 기록했다.

군은 사업 시행 이후 추가 발급이 이어지면서 이용률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외출 빈도와 지역 소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이용 증가로 장보기, 병원 방문, 외식 등 일상 활동이 늘어나면서 단양읍 중심 상권과 각 읍·면 소재지의 소규모 점포들도 어르

신 고객 유입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

특히 교통비 절감으로 소비 여력이 커지면서 월 기준 약 3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비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의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은 연간 약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교통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고령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인이 살기 편한 단양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찾아가는 상상대로 디지털버스' 본격운영

마을 방문 맞춤형교육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음성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상대로 디지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음성군은 12일 지역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상상대로 디지털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상대로 디지털버스'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운영되며, 문해교육사가 마을과 단체를 직접 방문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고흥사랑기부금 지원을 받아 한 학습장당 3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반복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또 9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양한 계층

이 쉽고 재미있게 디지털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고속버스 승차권 발매, 무인 주문 키오스크 활용법, 각종 정부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반복 체험 중심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상상대로 디지털버스'는 5인 이상 마을 또는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시범운영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03개 학습장에서 948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정자 평생학습과장은 "찾아가는 상상대로 디지털버스는 지역사회의 디지털 소외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평생교육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 조성 추진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 노인복지 확장

진천군은 군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겨진 천형 복지모델' 확장을 위해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 조성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바탕으로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을 수립해 진천형 사회보장 전략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먼저 통합돌봄 정책의 주력 사업으로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 조성에 들어간다. 이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정책을 구체화한 노인복지 모델로, 퇴원·퇴소 이후 머무를 곳이 없어 재입원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령자 돌봄 지원주택 사업은 이월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운영 방식은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단기회복지원형 1곳과 장기거주형 원로 4곳 등 두 가지 형태로 마련된다.

단기회복지원형은 퇴원 환자에게 의료·요양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

는 주택이며, 장기거주형 주택은 주거와 돌봄을 결합해 고령자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의 일상 안전과 복지 기반을 강화해 온 군은 올해부터 어르신이 생활 속에서 존중받는 노인복지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분관 조성, 경로식당 환경 개선, 요양시설 돌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노인복지관 분관 설계를 마치고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에서는 복지+디자인+주택의 개념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구성

주택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 공간 체험

유디체험관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적용 일상용품 이해

휠체어 체험관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휠체어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행 체험

교육 신청하기 > 043-234-0840~2

UNIVERSAL DESIGN

돌봄교실 참여 초등생 '국산 과일간식' 제공

3월부터 여건 따라 순차 시행... 4월부터 본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과 과채류를 주 1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빵이나 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 중심의 식단에서 벗어나 신선한 제철 과일을 공급해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 운영되어 식습관 개

선 효과와 높은 현장 만족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다시 추진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2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유통 체계를 구축했다.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3월 중 간식 공급을 시작하며, 4월 이후에는 전국 단위로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제공되는 과일은 국내 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의 품질을



돌봄교실 과일간식 예시.

유지하며,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을 우선 활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 간식의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

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국산 과일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엄격한 품질 관리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발표

대상·확대·전주기 돌봄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으로 정책의 큰 틀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중·고등학교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와 요양 등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제공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

대된다.

1단계에서는 보건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의 기존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해 제공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등 신규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3단계에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돌봄 체계를 구축해 총 60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욕구를 통합 조사해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



통합돌봄 신청·연계체계의 단계적 고도화.

역사회 통합돌봄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

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향후 5년간의 과제를 담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연탄사용가구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연탄쿠폰 최대 1만 가구 대상... 고효율 난방 전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발급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철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에너지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기후 위기로 저탄소 전환이 시급해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 배출이 많은 연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

을 일부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연탄쿠폰 발급가구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통해 전화로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의향과 전환 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선별된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단열 환경 등 주거 여건을 정밀 조사하고,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 후속 에너지복지 연계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

히 에너지 효율 개선뿐 아니라 저탄소·청정에너지 전환 가능성까지 고려해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전환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단열 공사를 지원한다. 난방연료를 전환한 가구에는 동절기부터 기존 연탄쿠폰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연탄쿠폰 가구 가운데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병행해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총 1086억 원을 투입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3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

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난방지원사업은 여름철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 접수 종료일이 있으며, 난방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난방 지원 1만 9000가구와 150개 시설, 난방 지원 3만 7000가구와 15개 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고객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된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지방거주 아동 매월 5000원~2만원 추가 지급 등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급 연령 상향과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까지

공급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 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법 공포일부터 시행해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생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지급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협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2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30일부터 신청 접수... 6만명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했으

며,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2026년에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에서 신설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 폐지됐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5

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9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5월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도 사전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재결서 '음성 지원 서비스' 개시

중앙행정위 등 90개 기관...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사건 정보, 청구 취지, 주문, 재결 이유 등 재결서

재결서는 우편으로 종이 문서를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사건 정보, 청구 취지, 주문, 재결 이유 등 재결서

전체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음성 변환 기술을 도입했다.

이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해 음성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먼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번 음성 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문서를 읽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도움 없이 행정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마당, 20년 나눔 발자취 돌아보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성료 중증장애인의 권익 향상 힘써 자원봉사자 노고 감사 전해

과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마당(대표 한상길)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06년 3월 설립 이후 중증지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법인의 20년 역사를 기념하고 그동안 함께해 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법인 임원과 산하시설 관계자, 지역 내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 법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감사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법인 관계자는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의 사회복지법인 마당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장을 수상한 한 후원자는 “작은 나눔이 모여 큰 희망이 되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인 산하시설인 청천재활원과 다온빌의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이용인 중심의 서비스 실천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료 직원들의 박수 속에 진행된 시상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종사자들의 노고와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한상길 대표는 “2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며, 그 시간 속에는 이용인의 성장과 변화, 종



사회복지법인 마당의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사자의 헌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복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전문 복지법인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으며, 후원 기관의 지원이 있었기에 그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었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 강화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 증진 협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 옥천지사 등과 재협약

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황명규)은 지난 5일 지역사회 취약

계층 지원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지사장 박종영) 및 한전MCS 주식회사 옥천지점

(지점장 이강춘)과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재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구축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해 협약을 통해 '제1회 옥천군장애인복지관장애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가 후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트로피를 전달할 수 있었다. 해당 대회는 장애인 바리스타의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 고취,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

으며, 후원 기관의 지원이 있었기에 그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과제 발굴,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원 및 정보 교류, 취약계층 장애인 지원 협조,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강춘 지점장은 “양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보태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명규 관장은 “이번 재협약을 계기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며,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23일 충북광역푸드뱅크에 500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했다.

새마을금고 충북본부, “따뜻한 한끼 드세요”

충북광역푸드뱅크에 쌀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인환)는 23일 'MG

따뜻한 한끼 쌀 나눔 지원사업'을 통해 충북광역푸드뱅크에 500만원 상당의 쌀 130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이사, 새마을원 상당의 쌀 130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송새마을금고이사장, 충북도

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기부로 마련된 사회공헌사업이다.

지원된 쌀은 소외계층에 전달돼 식생활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쌀 활용을 통해 농촌 쌀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병선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이사는 “이번 나눔은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한 끼를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웃 간 정을 나누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자립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일시: 2026. 3. 16.(월) 10:30 | 협의기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는 자립준비청년 주거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준비청년 돕는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와 협약 안정적 주거 정착 지원 강화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화정)와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센터장 이정희)는 16일 상호 간 사업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주거 체험(장·단기) 프로그램 운영 등 충북 내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장화정 관장은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

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더불어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위탁가정을 발굴, 연계, 교육하는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기관이다.

제천복지재단, “어르신들 안전하게 병원 다녀요”

'따숨동행 서비스' 시행

제천복지재단(이사장 신길순)은 지난 16일부터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제천형 따숨동행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며 65세 이상 병원 이용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행자로 나섰다.

이 서비스는 병원 방문 시 보호자의 동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진료 접수부터 수납, 약국 방문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안전한 병원 생활을 도와준다.

제천복지재단은 이 서비스 외에도 돌봄 식사 지원사업인 '다함께 찬찬찬', 맞춤형 노인 주거 지원 등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



제천형 따숨동행 서비스에 이용되는 차량.

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는 중장기 목표 아래 사회복지 전문성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바탕으로 탄탄한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제천복지재단의 노력이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1인 노인 가구 확산으로 가

족의 돌봄이 어려운 현실에서 '따숨동행 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병원 이용을, 가족들에게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제천복지재단 누리집(www.jcwf.or.kr)과 유선(☎043-647-1237)문의 가능하다.

충주어울림센터, 정신건강 회복 새 장 열어

'동료지원센터' 개소

사회복지법인 승덕원 충주어울림센터(관장 한금희)는 5일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동료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동료지원센터는 정신질환과 회복 경험을 가진 '동료지원인'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신

장애인의 회복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돕는 공간이다.

어울림센터는 2020년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후 매년 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금까지 총 8명의 동료지원인을 양성했으며, 지난해부터 기관 차원의 동료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한금희 관장은 “수년간 동료지원인을 양성하며 활동 역량을 키

워왔는데 심터를 마련해 개소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백 동료지원인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센터를 마련해준 충주어울림센터에 감사하다”며 “오랜 치료와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www.043w.or.kr

충북복지넷

🔍
충청북도의 복지정보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

맞춤복지서비스찾기

복지정보.연구

SSN 교육

바로가기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발표

의료·재활·예방 아우르는 '장애인 건강관리 국가체계' 구축
통합돌봄 확대와 정책 기반 강화를 통해 전 생애 건강지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종합계획으로, 장애인의 전 생애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 영역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장애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종합계획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화 의료기관 지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등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의료 이용의 불편과 건강격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장벽 없는 의료 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장애인 건강정책 기반 마련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2대 과제와 32개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벽 없는 의료 이용

기준에 상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개별 운영되던 장애인화 의료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진료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증증 및 복합질환 진료가 가능한 통합형 의료기관인 (가칭)장애인화병원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고 접수부터 진료, 검사, 수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장애인화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인화 의료기관은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특히 기존 장애인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기능을 부여하고, 세 가지 이상의 장애인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형 장애인화병원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제도 전반에 장애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의 진료는 장애 특성에 따라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를 거쳐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2028년 적용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의료기관 평가체계에도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화 의료기관뿐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도 장애 포용적 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이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인 편의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인력의 장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식개선 교육과 진료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고, 실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도록 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현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산과 세종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센터와 보건소의 역할을 확대해 지역 단위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가 협력해 의료·요양·재활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어려운 중증 외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도 확대한다.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늘리고, 민간 구급차 이용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모델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한다. 읍산시 사별과 같은 우수사업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이동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검토된다. 중증장애인이 입원할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병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사의 병원 동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복적·정기적 입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이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지원 대상과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의료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특히 권역재활병원의 기능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특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재활의료기관 간 역할을 구분해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재활, 지역사회 재활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치료체계를 마련한다.

아동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료 기반도 확대한다. 소아재활 전문기관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성장 과정에 맞는 지속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도 본격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퇴원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다시 입원하는 상황을 줄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설 퇴소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병원 퇴원 장애인까지 포함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아울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도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내 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지원도 확대된다.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해 상주 또는 순회 방식으로 일상적인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13개 시·도에서 올해안에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기반도 강화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지도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힌다.

생활체육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재활치료와 생활체육 사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재활운동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체육시설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장기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시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한다.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다학제 협진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해 장애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건강관리 가능하도록 한다.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교육도 확대한다.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질환별 특성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고,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체계도 강화한다. 당면지정기관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개선해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한다. 또한 지역별 설치 여건을 고려해 당면지정기관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속 확대 설치한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유형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장애를 신



2026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규 장애유형으로 추가하고,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장애의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발달장애인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도 강화한다. 시·도 단위 장애인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해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는다.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검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시설과 인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문적인 진료와 재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의사소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사업을 통해 시간·청각·발달·언어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수어 표준화를 추진해 진료 과정에서의 정보 전달 오류를 줄인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화 산부인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분만의 경우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연계하고, 지정 기준을 부인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장애인 건강 정책 기반 마련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가 단위 조사에 장애인 여부 구분을 포함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 주요 보건통계 조사에 장애 여부를 반영해 장애인의 건강 상태와 질병 특성을 별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한다. 건강보험 자료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기존 통계에 비급여 진료비, 장애인 체질량지수(BMI) 등 건강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단년도 통계 발표에 그치지 않고 장기 추적 데이터를 구축해 장애인의 중장기 건강변화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 사업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 수립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건강관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보 연계체계도 구축한다. 예비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장애 등록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정보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에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장애인이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건강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 등록 초기부터 건강관리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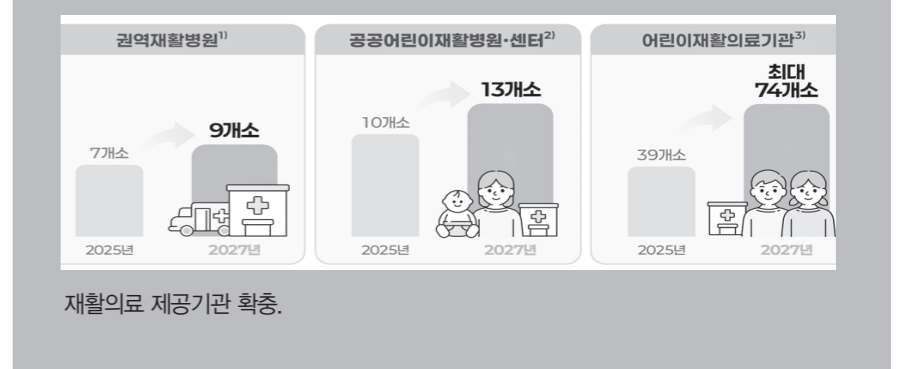
정부는 종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계획 수립 이후 연도별 추진 결과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에는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1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방향을 보완해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소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시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복지광장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의무



변 나 영

충북여성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

여성가족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가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었다.

멈추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여성들의 상대적 취약성 등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젠더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젠더폭력이란 무엇일까? 넓은 의미

로 본다면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는 현재에도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범죄이며,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유엔은 젠더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명명하고 1993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하였다.

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정신적 폭력과 통제, 경제적·성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공중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발생하며, 직장이나 집 등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과 공포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지나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 등과 관련한 상담이 3300건을 넘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던 여성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변했으니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는 말을 마치 진부한 표현처럼 치부하며 성차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여성의 일반적인 지위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개선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의미에서의 개선일 뿐, 아직도 성차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분명한 모습으로, 때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형태로 여성들의 삶을 제약하고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여전히 피해자들은 입을 열어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우리 사회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말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왔다. 분명한 사실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따라서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

폭력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상대적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을 용인하는 직장과 사회 전반의 잘못된 문화와 제도를 바꾸어 가는 노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Me too'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가는 곳마다 많은 후보자들이 얼굴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정치 공약 속에 과연 젠더폭력 근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후보자는 몇이나 될지 되묻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안전이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앞장서 이에 따른 정책과 제도,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 중심'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젠더폭력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를 외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정책과 교육,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 어쩌면 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임이자 살아남는 이들의 사회적 소명일지도 모른다.

복지칼럼

청년 복지의 새로운 과제



김 승 관

충청북도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팀장

2026년 3월 26일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제도권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돌봄 제공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었지만, 정책은 주로 '취약계층' 혹은 '청년'이라는 단편적 범주 안에서만 접근해 왔다. 이번 법률은 이러한 단절을 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가족돌봄 청년들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을 겪는 것이 아니라,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학업을 병행하며 가족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험은 장기적으로 청년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키고 삶의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의 시행은 가족돌봄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위기청년을 바라보는 정책 인식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 현장에서는 가족돌봄 청년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 역시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 부담,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또래 관계와 사회활동

이 단절되고, 장기간의 돌봄 부담이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은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은 서로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청년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법은 '발굴-상담-맞춤형 지원-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돌봄 부담 완화, 학업·고용 연계, 심리·정서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위기아동·청년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의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의 시행이 곧 현장의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첫째, '적극적 발굴' 체계가 필요하다. 가족돌봄 청년이나 고립·은둔 청년은 스스로를 지원 대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 지역사회, 의료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위기 상황은 복합적이며 단일 서비스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지역 내 청년센터, 복지기관, 의료 영역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당사자가 여러 제도를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였다. 법 시행은 이러한 단절을 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셋째, 청년의 '권리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와 평가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은 대상자를 보호의 객체가 아닌 변화의 주체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지속 가능성을 갖게 된다.

충북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지역 구조, 돌봄 자원의 편차, 청년 인구 유출 문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이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법 시행은 단순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가 돌봄과 위기의 부담을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청년의 삶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법의 취지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청년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안 유 진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사

나는 장애인이란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 '살면서 만나게 되면 꼭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접근해 왔고, 그 외에는 깊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실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무장애 사회 등을 외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된 불평등 및 불공정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장애인이 평범하게 즐기는 외식이

나 쇼핑, 여행 등의 여가·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개인 신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동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해피콜)를 부른 후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장소에 도착하면 보장구 사용 여부에 따라 책걸상 및 공간의 구조를 바꿔 비로소 본격적으로 활동을 즐긴다.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로 해피콜 혹은 자신의 자가용으로 이동하고 자신의 몸이나 반경에 책걸상을 맞추며, 업무나 상황에 따라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많은 바를 수행한다.

매우 길고, 고단한 과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역할을 무탈히 수행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녹아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결코 부당한 일이 있을 때까지만 있지 않으며, 원하는 것을 누군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는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거나, 마땅히 누리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몸으로 과감히 표현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비장애인의 중심에서 외치는 공정 및 평등한 사회가 장애인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외침에도 사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비장애인의 중심에서 선을 그으며 바라보고 듣기 때문에 알맞은 응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저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만이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피콜이 나의 발자대 중교통이나 원하는 시간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을 위한 경사로와 안전 손잡이, 점자블록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키오스크의 높이 조절, 음성 안내와 점자 스티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화장실 이용을 위해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너비한 크기와 높이에 맞는 세면대 설치, 바로 옆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버튼이 설치되도록 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침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후여 들어준다고 해도 결과물은 장애인인 아닌 비장애인 우선으로 결할기식 대응에 그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그래서 직접 외치고 움직여 확실한 응답을 얻어 낸다. 실질적으로 공공 편의 시설 중에는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생겨나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다.

다양한 직업군과 학생 집단,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작은 사회를 형성하

듯 장애인 또한 자신의 생활 반경 속에서 또 하나의 작은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들은 서로간의 필요에 따라 규칙을 만들어가고,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해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만나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존재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장애인 또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상과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때때로 마주하는 여러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이해되어 인식이 넓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구분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보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제도과 정책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함께 바뀔 때 비로소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삶이 가능해질 것이다.

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법률 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상담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등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 홈닥터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딸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몇 달 전 사소한 일로 언쟁을 하다가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벌금을 나눠 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이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벌과금 납부촉탁서를 발급하고,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대응 방법과 구제 제도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하려면 관할 지역 검찰청 민원실에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는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참조). 허가가 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가능하며, 추가로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할 검찰청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어, 질문자의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대신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

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허가된 경우 통상 1일(8시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경우 총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동정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회장 임진숙 / 2월 25일자
- 충북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이사장 한정현 / 2월 26일자
- 음성꽃동네노수인재활원
▷ 원장 용세용 / 3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노동)관장 변경 법(내) 이동 등에 대해 개제를 원하시는 사안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대리

지역사회봉사단

금빛봉사공연단,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활력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영모) 소속 '금빛봉사공연단(단장 김춘영, 이하 금빛봉사단)'은 2010년 교직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풍성한 경험과 재능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클라리넷, 색소폰, 하모니카 악기연주를 비롯해 마술공연과 노래 메들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금빛봉사단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능력 회복을 돕고, 신체 기능 유지와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월 2회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정기적인 공연봉사를 진행하며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또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만/평

성찰

이창신 www.bokmani.com



관찰하려면 바깥을 봐야 하고

성찰하려면 내면을 봐야 한다.

성찰이 성장을 만듭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12월 31일(상시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니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www.043w.or.kr

[청주정신건강센터, 녹색자금 숲체험·교육 지원 사업 운영 안내]

- 사업내용: 산림청, 북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후원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속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금 숲체험·교육 지원 사업
- 운영기간: 2026년 2월 말 ~ 10월
- 운영형태: 당일형·숙박형 숲체험 프로그램
- 사업대상: 청주 지역 정신장애인 및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 당일형 5회, 숙박형 4회 총 9회기 운영 - 숲길 걷기, 명상, 감정 나눔, 자연 기반 체험 활동 등
- 신청문의: 청주정신건강센터(043-285-0102)
- 접수방법: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cjmental01@naver.com) 접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필요

복지정보 제공

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 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T. 043-716-2168~9)

[한국전력 충북본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비용 지원(시설당 1600만원)
-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에너지효율 1등급 고효율 냉방기, 방난방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 실외기 3개 품목
- 신청기간: ~2026. 12. 18.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제출서류 다룬 및 작성 후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 참고: online.kepco.co.kr

[KBS강태원복지재단, 2026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관: 전국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마을단위 NGO 협약 체결 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내용: 위기가정 지원금 지원(1가정당 최대 500만원, 최대 2회 지원 가능), 수행기관 대상 사례관리 지원금 지원(위기가정 지원금의 10%)
- 지원항목: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교육·양육비
- 신청기간: 월 1회(1일~15일)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기간: 2026년 2월~12월
- 참고: www.kbsktw.com

[우안재단, 2026년 새출발 소원상자 사업 신청 및 결과보고 안내]

- 신청기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전국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이주민여성쉼터)
- 사업대상: 신청기관의 퇴소자로 신청일 기준 해당월에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예정된 가정, 퇴소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입주초기 생활·정서·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
- 지원내용: 1가정당 먹거리, 생필품, 자기개발 물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사업기간: 2026년 2월~12월
- 지원물품: 먹거리(최소 20만원~30만원), 생활용품(최대 20만원 이하), 자기개발(최대 10만원 이하)
- 신청방법: 구급품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

[한국증권금융공나눔재단, 주거기전통합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퇴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2026년 LH 전세/매입/건설 신규 계약 체결자(단, 소년소녀 가장 제외), 임대조건 상 납부할 임대보증금이 있으며, 보증금을 전액 본인 명의로 납부한 자, 2026년 아동양육시설 퇴소(예정)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100만원 지원 및 가전, 가구, 침구 등 자립키트 200만원 지원(단,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 지원불가)
- 신청: 임대보증금(LH청약플러스 사이트 내 '유스타트' 메뉴 통해 접수), 자립키트(이메일 knacw2@adongbokji.or.kr)제출
- 문의: 한국아동복지협회(070-5080-5331)

[홀트아동복지회, IBK기업은행-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참여 모집]

- 모집기간: 2026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자격: (공통) 2024~2025년도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구유형) 긴급지원이 필요한 24주 이상의 미혼임산부,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미혼모, 다문화 미혼모자 가정
- 지원내용: 항목별 합산 가정별 최대 200만원
- 지원항목: 생계비, 양육비, 의료비, 주거비, 심리상담비
- 신청방법: (개인)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기관)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참고: love.holt.or.kr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4.1~4.30
전화번호: 043-234-0840

▶ **어르신 식사배달**
관리센터: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4.1~4.30
전화번호: 043-263-1817

▶ **초등학교 프로그램 지도**
관리센터: 영은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4.1~4.30
전화번호: 043-250-6800

▶ **놀이 서포터즈**
관리센터: 청주사회복지관
활동기간: 4.1~4.30
전화번호: 043-253-4493

▶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
관리센터: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4.1~4.30
전화번호: 043-846-2253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괴산제일요양원
활동기간: 4.1~4.30
전화번호: 043-833-7763

▶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4.1~4.30
전화번호: 043-285-0102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홀로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생애 1회)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전입신고 필수)

신청인원
전국 6만명(지역별 선정인원 수가 다름)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월세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월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과거 국토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일: '24.2월~'25.2월) 수혜자는 2차 사업 지원 종료 시(2027년 12월)까지 신청 불가

지원한도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6.3.30(화) 09:00 ~ 2026.5.29(금) 16:00
신청자 발표: 2026.9.14(화)
*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소득·재산 기준
소득: 청년월세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청년월세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배우+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만립'상 가족)